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증시 재평가 신호탄

주총 전 처리 목표로 입법 속도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신설
기보유 자사주도 1년6개월 적용
발행주식 감소로 EPS 개선 기대
시장 “주주환원 강화” 긍정 평가
재계 “M&A 취득분 예외” 요구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 증권가 안팎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연쇄 개정에 대해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은 시작”이라며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건물에 ‘코스피 5000’ 경신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일정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대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조항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수급 측면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건 ‘발행주식 수 감소’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가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해,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이 순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유가증권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 수 증가가 EPS 성장을 제약해왔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 수가 연평균 1%가량 추가로 감소하면서 코스피가 재평가되는 흐름이 이어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있다. 미국의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 수의 약 39%에 달하는 100억주 이상을 매입해 소각했다. 이 기간 애플의 주가는 약 10배 이상 상승했고, EPS는 연평균 15.7% 성장했다. LG 그룹도 주가 부양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1100억주, LG유플러스 1000억주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기업은 소각에 소극적이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의 조사를 보면 지난 시기총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주를 소각한 곳은 80개 기업이었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넘겨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해 왔

고, 이 때문에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서 “실제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곳이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있어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주주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 시장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회사가 여윌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만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자사주의 경우 ‘2년 내’ 소각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IMF·금융위기·코로나19 넘어… ‘오뎅이 저력’ 70년

대한증권거래소 1956년 출범
상장사 12곳서 2781곳 ‘초대형 시장’
작년 10월 ‘4000 시대’ 열고 새 기록

코스피가 사상 첫 ‘오천피’(코스피 5000)를 돌파하며 70년 역사를 새로 썼다.

22일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02.88을 기록하며 꿈의 지수 ‘5000’을 넘어섰다. 1956년 증권거래소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한국 자본 시장이 걸어온 시간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53년 11월 설립된 대한증권업협회가 주식시장

개설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증권거래소가 태동했다.

개장 당시 상장사는 12곳에 불과했지만, 1973년 최초로 100개를 넘어섰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844개사와 코스닥 1824개사 등 2781개사로 늘어났다. 시가총액도 개장 첫째 150억원에서 4660조원까지 불어났다. 지난 1월 16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000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점은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이다. 개장 첫째 주식 거래대금은 현재 가치로 환

산해 약 3억9000만원이었고, 1961년 4억원에 그쳤던 주식 거래대금은 이듬해 1000억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첫 위기는 1962년으로 5월 ‘증권 파동’ 때 찾아왔다. 당시 시장 팽창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인해 거래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 특별법과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을 잇따라 마련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기업들의 상장 러시가 이뤄졌다.

코스피는 5000선에 달기까지 우여곡절을 반복했다.

코스피 지수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은 1983년 1월 4일이다. 지수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됐으며, 첫 발표 당시 수치는 122.52였다. 이후 1989년 3월 31일 1000선을 처음 돌파했고, 1997년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1998년 6월 16일 코스피는 277.37까지 급락했다. 정보기술(IT) 투자 열풍을 발판 삼아 1999년 다시 1000선을 회복했지만, IT 버블 붕괴와 건설 경기 과열 후유증, 9·11 테러가 겹치며 지수는 다시 400선까지 후퇴했다. 2007년에 다시 2000선을 넘어섰

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1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2017년 들어서는 세계 반도체 경기 호황에 2500선을 넘어섰으나 다시 하락세를 맞이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1500선까지 추락했고, 개인 매수세가 유입된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급반등해 2021년 1월 ‘삼천피’에 도달했다.

이후 2024년 말 비상계입 여파 등으로 2399.49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며 지난해 6월 3000선을 회복했다.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사상 첫 ‘4000 시대’에 진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75.9% 오른 코스피는 새해 들어서도 상승 동력을 유지하며 이날 장중 5000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신하은 기자

“韓, AI 수혜 시장으로 전환… 상승여력 충분”

AI 설비투자 급증, 메모리 수요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멘텀 지속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고지를 넘자 외신들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정부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 개선 노력이 이번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을 내놨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이번 펄리는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AI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를 놀렸던 코



Chat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수혜감에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가 계속 해결되며 상승 동력(모멘텀)이 더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

이다.

또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등 AI 설비 투자가 급증하며 한국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낙관적 전망의 근거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많은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칩의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의 자본 시장 선진화 조치가 오천피 달성에 힘이 됐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주주권익을 강화하고 불투명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7월과 9월 두차례 상법 개정을 단행했고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원·달러 1469.9원 마감… 이틀째 하락세

李 대통령 ‘1400원’ 언급 후 하락 지속

이재명 대통령의 ‘1400원’ 발언 이후 큰 폭으로 올랐던 원화값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국내 경제 상황 대비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오는 가운데 적극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사가 시장에 반영된 영향이다.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69.9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일 종가보다 1.4원(0.95%) 내린 수준으로, 이틀 연속 하락(원화가치 상승)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개입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

사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언급했다. 직전일 달러당 1478.1원이었던 환율은 21일 오후에는 1471.3원까지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원화는 엔화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9월 30일 이후 4달 연속으로 1400원을 상회하고 있다. 달러화가 불확실성 확대, 연준 독점성 우려 등을 이유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에 있지만, 원화와 동조율이 높은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